제5회
KWO 나지포럼

(전쟁기념사업회 나라를 지키는 포럼)

2024년 11월 21일(목)
14:00~15:30
전쟁기념관 3F 워리어 라운지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정세

전쟁기념사업회
KWO Korea War-memorial Organization

제5회 KWO 나지포럼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정세

제5회 KWO 나지포럼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정세

일시 : 2024년 11월 21일(목) 14:00~15:30
장소 : 전쟁기념관 3F 워리어 라운지
주최 : 전쟁기념사업회

발표주제와 순서

구분	시간	내 용
등록	13:30~14:00	• **등록 및 명찰, 자료집 배부**
개회식	14:00~14:10	• **개회사**(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 **기념촬영**
주제발표	14:10~14:25	【**사회**】 백승주(전쟁기념사업회장) 【**발표**】 **MAGA 시대 한국 외교안보의 핵심과제와 정책 방향** 남성욱(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장)
종합토론	14:25~14:45	【**좌장**】 백승주(전쟁기념사업회장) 【**토론**】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통일학연구원장) 최윤희(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 前 합참의장) 김원수(前 유엔사무차장) 신석호(동아닷컴 전무이사·동아일보 화정평화재단 연구위원)
리셉션	14:45~15:30	• **환담**(다과)
폐회	15:30	• **폐회 선언**

〈목 차〉

【주제발표】

MAGA 시대 한국 외교안보의 핵심과제와 정책 방향

▌남성욱 ····· 7

1. 대선의 승패는 경제 이슈 ····· 9

2. MAGA 2기 외교안보 정책 전망 ····· 10

3. 맺는말 : 강한 국력과 스마트한 외교로 트럼피즘 파고 넘어야 ····· 17

【종합토론】

박원곤 ····· 23

최윤희 ····· 29

김원수 ····· 30

신석호 ····· 35

다자토론 ····· 39

MAGA* 시대 한국 외교안보의 핵심과제와 정책 방향

남 성 욱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1. 대선의 승패는 경제 이슈

미국 대선 당일인 11월 5일자 조간인 뉴욕타임스 1면 오피니언에 게재된 글을 보고 트럼프의 당선을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제목은 '이기든 지든 트럼프는 이미 승자다(Win or lose, Trump has already won)'였다. 미국 시사잡지 콤팩트(Compact)의 편집장인 매튜 스미츠는 무역과 이민 문제에 대한 트럼프의 정책이 상당한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승패와 관계없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미국인들의 팍팍한 살림살이를 개선하는 데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진보성향의 뉴욕타임스 입장에서도 매튜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는 판단인 것 같았다. 자유무역과 불법 이민이 미국 사회의 핵심 화두라는 점을 지적한 것은 주목할만했다. 트럼프의 이례적 압승으로 그의 주장이 정확하게 미국의 현실을 반영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트럼피즘은 이제 미국의 뉴노멀이 되었다.

그는 세계화와 자유무역주의에 따라 저임금 국가에서 생산한 물건을 수입해서 싸게 소비했지만,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았다고 강조했다. 감당할 수 없는 불법 이민자들의 수용은 한계에 도달했다. 심지어 불법 이민자들의 2세들조차 후속 불법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미국에서 일하는 아들, 딸 및 지인들과 통화할 때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며 물가가 너무 올랐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연봉 10만 불을 받아도 대도시의 높은 주거비와 식비를 지불하면 지갑은 어느새 빈털터리가 된다. 외식의 경우 3인 식사를 하면 높아진 팁 때문에 항상 4인의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당국이 코로나 보조금으로 돈을 헬리콥터로 살포하다시피 한 결과다. 금년도 전반기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5천 불을 넘어섰지만 3억 3천만 인구 중에서 30% 내외로 추산되는 서민들의 삶은 만만치 않다. 일자리는 있지만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쓸 돈이 없다.

높은 물가에 밀려드는 불법 이민자와 자유무역에 지쳐버린 중하위층과 백인 저소득층은 트럼프의 귀환을 선택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economy, stupid.)'라는 과거 클린턴 대통령의 구호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은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가 결정적인 선택의 기준이었다. 막말 논란,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유권자를 제외하고는 부차적인 이슈였다.

이번 선거가 지난 4년 바이든 정부에 대한 평가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부통령이었던 해리스 후보로서는 현직의 프리미엄보다는 유권자들의 불만을 달래기에 어려움이 컸다. 미국 사회가 여전히 여성 정치인에게는 유리천장의 벽이 있다는 것도 해리스 후보에게는 핸디캡이었다. 남녀를 구분하는 낙태권 등 젠더 이슈만으로 백악관에 입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돈의, 돈에 의한, 돈을 위한 동맹(Alliance of the money, by the money, for the money)'을 강조하는 트럼프가 불사조처럼 살아왔다. 깊은 동맹(deep alliance)의 시대는 가고 거래 동맹(easy alliance) 시대가 도래했다. 상호거래에 따른 이득의 관점에서 한미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트럼프 후보와 통화하고 협력관계를 이어가자고 했지만, 동상이몽은 불가피하다.

2. MAGA 2기 외교안보 정책 전망

1) 바이든 지우기 정책(ABB)

불사조 트럼프가 귀환했다. 그의 정책은 바이든 정부 정책 지우기(ABB: Anything but Biden)가 될 것이다. 개입주의(engagement)보다는 극단적이고 편협한 고립주의(narrow-minded isolation)로 회귀하면서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세계 경찰로서 미국의 역할은 종료된다. 미국의 전통적인 국제질서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구호에 걸맞게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한다. 그는 지난 7월 19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후보 지명 수락 연설을 통해 중국을 포함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자동차 및 기타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다. 기후변화 협약 탈퇴 등 국제협약은 중요하지 않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을 현 행정부가 일으켰다고 비난하며, 모든 국제적 위기를 종식시키겠다."라고 다짐했다. 특히 "지금 유럽과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대만, 한국, 필리핀, 그리고 아시아 전역에 분쟁의 유령이 떠오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 트럼프는 자신이 재임 시절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잘 지냈고" 그의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자랑했다. 그는 "지금 북한은 다시 도발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만, 나는 김 위원장과 잘 지내고 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도 내가 돌아오면 보고 싶어 할 것이다"라고 말해 지지자들의 웃음과 박수를 끌어냈다.

모든 국내 및 외교·안보 공약이 바이든 정부의 정책과는 결이 다르다. 황야의 무법자 카우보이처럼 모든 현행 정책에 칼질이 들어갈 것이다.

2) 원점에서 새로 시작하는 외교안보 공약 : Zero base approach

가. 안보 불확실성 심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트럼프 당선으로 한미동맹 조약(since 1953)이 체결된 이후 가장 심각한 도전과 시련기가 다가올 것이다. 그의 대외 정책은 예측 불가능성으로 기존 틀을 흔들어 놓을 것이다. 동맹국들은 그의 일방적인 주장과 정책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 카드는 대한(對韓) 정책에서 트럼프의 전가 보도가 될 것이다. 미 국방수권법 차원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항목이 있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개인적 철학과 신념, 지난 1기에 지속적인 주장에

도 참모들에 의해 완수하지 못했던 부분을 미완의 과제처럼 인식할 수 있다. 충성파들로 채워진 2기 트럼프 행정부 각료들은 경쟁적으로 MAGA 정책을 추진해서 트럼프의 신임을 얻으려고 할 것이다.

또한, 의회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여 주한미군 철수 관련 법안 개정이 가능하며, 행정명령을 통해 철수, 감축 등을 포함한 상징적·실질적 조치할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

그는 ▲국익을 위해 파리 기후변화협정, 유네스코 등 여러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며, 미국의 주권을 강조한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몽을 견제하고,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강경한 입장이다.[1] ▲이란 핵협정 탈퇴와 이스라엘 지지를 선언했다.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 복원 의지도 시사했다. 그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이고, 오늘 김정은이 한국으로 가는 철도를 폭파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며 "이는 큰일이며, 한국은 러시아나 중국 등과 단절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남북이 도로를 통한 육로 왕래는 실현된 적이 없는데도 이를 한국의 고립처럼 표현한 것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후보는 소셜미디어에서도 북한의 철도와 도로 폭파를 언급하며 "오직 트럼프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나. GDP 대비 3.5% 방위비 인상

트럼프 당선자는 ▲동맹국과의 관계 재조정으로 NATO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을 강하게 요구한다.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보호하지 않겠다고 경고한다. 미국의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동맹국의 방위비를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

---

1 차기 국무장관으로 유력한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58)은 중국에 대한 강경 노선 및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등을 강조한다.

NATO 국가들의 방위비를 GDP의 3% 선까지 인상을 요구하여 독일이 반발하는 등 동맹국과의 갈등은 불가피하다.[2] 그는 2020년 한국의 방위비를 연 1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선으로 인상을 요구했다. 트럼프 2기에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거론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지난 9월 일본이 최근 방위비를 크게 올렸다며 한국도 미국처럼 GDP의 3~3.5%를 방위비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10월 15일 자신이 재임 중이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원)를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하면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가 언급한 연간 100억 달러는 한국이 2026년 이후 지불할 액수의 9배 가까운 액수다. 한미는 10월 초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 5,192억 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는 내용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문안을 타결했다.

※"그들은 머니 머신(They are Money Machine)"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으로 예상되는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9월 26일 미국기업연구소(AEI) 대담에서도 "한국의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5%인데, 미국처럼 3%~3.5%까지 올라가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국인 한국에 매우 헌신적이며 과거에 한 일을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내 생각에 한국 내 우려의 일부는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 차기 국가안보보좌관(NSC)으로는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대사(58)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유럽 주요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 등을 외친다. 그는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한 8월 18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보호를 받고 싶으면 돈을 지불하라."라고 압박했다. 올 3월 팟캐스트에서도 "미국에는 강인한(tough) 수석 외교관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측근이자 국무장관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는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11월 9일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서 군사적 기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 북핵 군축 협상: nuclear parity approach

가치동맹(deep alliance)보다는 동맹 관계를 거래로 인식하는 트럼프는 북핵 문제에서 기존의 비핵화 입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난 30년간 동맹국들은 북한을 통제하지 못한 만큼 북핵 협상을 위해 제재 완화를 검토해야 하며 한국 정부는 좀 더 폭넓은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역할을 바꿀 시점이나 아직은 한국 자체의 핵무장을 말할 단계는 아니라는 급진적인 정책 전환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2기 국방정책 보고서'를 총괄 집필하고 차기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미 국방장관 대행은 "미북 간 군축 협상이 안 될 건 뭔가, 북핵은 호리병을 빠져나온 지니(genie out of battle)"라고 표현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는 결이 다른 이야기를 주장한다.[3]

트럼프 당선자는 북한 김정은과 직거래 회담을 통해서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핵 동결에 합의하는 스몰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9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북한은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한 것도 북핵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반영한 발언이다. 워싱턴의 기류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친한파 공화당 의원들이나 보수 연구소(think thank)에서 부분 비핵화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희망적 사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라. 미중 갈등과 동북아의 긴장

트럼프가 동맹 부담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대중 견제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강

3 아프가니스탄 미군 병력 감축 등 트럼프 후보의 요구 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

력히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가 대중 고관세 조치를 단행하고 첨단 기술 분야의 경쟁을 심화하면 바이든 정부의 디리스킹(derisking)으로 수사적으로나마 완화된 듯 보였던 탈동조화(decoupling) 기조가 다시 강화될 것이다.

트럼프는 대중 견제에서 한국을 비롯한 주요 관련국들의 동참을 요구할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과 핵협의그룹(NCG)을 북한이 아닌 대중(對中) 견제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병력 이동을 통해 대만 방어에 나설 수 있다. NCG와 같이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성과를 희석하는 차원에서 그 기능을 중국 견제 중심으로 재편하거나 아예 NCG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고비용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마. 미국의 고립주의 외교와 국제분쟁의 현상 동결

트럼프는 유세 기간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탓으로 돌렸다. 미 대선을 코앞에 둔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승리 계획'에 국제사회 지지를 호소하며 바삐 움직였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선동했다."라며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푸틴이 트럼프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다.'라는 민주당 측 비판에 반박했다.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2' 제재한 것을 두고는 "러시아가 지금까지 한 가장 큰 일을 끝내버렸다."라고 했다.

트럼프는 10월 17일 공개된 보수 성향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그(젤렌스키 대통령)는 전쟁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패배자"라고 말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쟁이 지금까지 이어진 데 대한 책임이 우크라이나에 있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뒷받침한 것이다.

그는 그동안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 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그는 푸틴 대통령과의 친분을 종종 과시하거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멈추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21세기 중국과 전쟁을 어떻게 피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중국에 대해서도 확실한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만약 우리가 (중국과 전쟁을) 한다면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며 그들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지금) 그 계획을 알려줄 수 없다."라며 "미리 알려주면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해리스 부통령이 휴전 촉구와 이스라엘 지지로 줄타기하는 사이, 트럼프는 이스라엘 전폭 지지로 차별화를 시도했다. 미국 정치·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대계 표심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내 유대계와 아랍계 유권자를 향한 두 후보 간 득표 전략도 치열했었다. 아랍계 미 유권자들의 민심 이반이 뼈아픈 해리스로선 이스라엘을 마냥 압박할 수도, 지지할 수도 없는 딜레마를 보여주었다. 미국의 고립주의 외교에서 예외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한 지원이 될 것이다.

10월 12일 공개된 월스트리트저널(WSJ)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7개 주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대응에 있어, 해리스 부통령을 50% 대 39%로 앞섰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더 잘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48%로 해리스 부통령 33%를 앞섰다.

바. 트럼프, 푸틴·김정은 브로맨스(bromance)

트럼프의 당선으로 '트럼프-푸틴-김정은' 3각 라인이 형성될 가능성이 짙어졌다. 한국이 이 3각 구도에서 '패싱'(투명인간 취급)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동맹을 압박해 온 반면 권위주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친근감을 표시해 왔다.

트럼프는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에서 피격 후 처음으로 열린 유세에서 북한 독재자 김정은과 잘 지낸 것이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등 전 세계 독재자들과의 관계에 대해 자랑했다. AFP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로이터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진

핑 중국 국가주석과 잘 지냈다면서 9월 13일 자신을 겨냥한 암살 미수 사건 후 시 주석에게서 "아름다운 편지(note)"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트럼프는 "나는 시 주석과 매우 잘 지냈다."라며 "그는 대단한 사람이다. (시 주석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듣고 며칠 전에 나에게 아름다운 편지를 썼다."라고 말했다. 공화당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동맹들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동맹이 우리를 이용해 왔다. 소위 우리의 동맹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날을 세우면서도 헝가리 오르반 총리가 마러라고(Mar-a-Lago) 회동에서 자신을 칭찬한 것을 자랑했고 김 위원장과도 잘 지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대선전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약함'을 비판하는 소재로도 스트롱맨들을 '활용'하고 있다. 그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푸틴 대통령, 시 주석을 거론하며 "바이든은 그들을 한 번도 압도하지 못했다."라면서 "그는 국제적 망신이고, 세계의 지도자들은 그를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3. 맺는말 : 강한 국력과 스마트한 외교로 트럼피즘 파고 넘어야

한국은 북러 군사 밀착 속에서 커지는 '트럼프 리스크'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기존 한미동맹의 기조와는 결이 다른 흐름이 예상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던 4년 전 최대 화두가 미중 전략경쟁이었다면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 반미 전선과의 관계 개선 및 압박이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정책 혼선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확장억제, 원자력협정 개정 및 통상 등 모든 현안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는 시나리오도 검토해야 한다.

우선 북핵 위협에 대한 한미 공조 수준을 높여야 한다. 한미 양측은 북한의 핵 고도화를 최대한 저지해야만 하고, 적극적인 국제협력을 견인하는 데 뜻을 모으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북핵 고도화 무용론에 대한 전략적 메시지를 북한에게 지속적으로 주지시켜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도 주한미군 주둔과 미국의 확장억제는 전혀 변화가 없음을 모색해야 한다.

다음은 대한민국 안보의 레드라인을 정확하게 설정하여 미국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비용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과 더불어 북한이 아닌 중국에 대한 군사적 대응 차원에서 평가해 왔다.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부차관보 등 소위 트럼프 측근들도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언급해 왔다.

지난 7년간 북한의 핵능력도 증가했지만,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서 동맹국인 한국의 전략적 가치도 전례 없이 높아졌다. 트럼프는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미국의 국익을 증가시킬 카드가 다양해졌다. 트럼프와 그의 외교 안보팀에서 북한이 아닌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도 동맹 관리에 과감하게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

셋째, 미북 핵군축 협상에 대비한 확고한 대응 원칙이 필요하다. 북한이 군축 협상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은바, 확고한 원칙 하에 한미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핵무장을 위한 다양한 준비도 마련해야 한다.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 당시와 같이 폐연료봉 재처리를 위한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한미 간의 전략적 소통과 대화도 시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러·우전쟁 이후의 한반도 안보 지형 변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러·우 전쟁 파병이 한반도 안보 및 통일 추진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합리적 전망과 실효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러·북 간 공군 및 해군력 분야 협력, 러시아 중고 핵추진잠수함 북한 제공, 전쟁 이후 러시아 방공망 북한 임시 배치, 북한 해군기지 러시아 활용, 러·북 합동 군사훈련 등의 분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처럼 북한에 러시아 군사력 일부가 배치되고, 양국 간 핵무기 고도화 기술 협력이 순조롭게 전개되는 시나리오도 검토될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 안정 및 우리의

자유 통일추진에 큰 장애가 될 것이다.[4]

트럼프 당선자는 조선업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을 요청했지만 아마 한국의 방위비 인상분으로 비용을 부담시킬 것이다. 조약 체결 72주년을 맞는 내년 을사년(乙巳年)은 새로운 한미 관계의 원년이 될 것이다. 한국의 외교 안보를 미국의 배려에만 의탁할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초격차 기술의 우위와 냉정한 외교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자강불식(自强不息)이 필수적이다. 대한민국의 국력 신장만이 트럼프의 존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해외 분쟁 불개입과 자국 우선주의, 극단적 보호무역과 미국 내 생산 압박 이슈가 커지면서 한국은 보다 심각한 외교적 과제를 안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트럼프 2기는 냉엄한 국제정치의 흐름 하에서 한국의 국익 확보에 차가운 겨울이 올 수도 있다(cold winter is coming)는 점을 예고한다. 우리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강력하고 세심하며 노련한 스마트 외교가 필요하다.

4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트럼프의 귀환과 한반도: 시사점과 대응 방향, 2024-11-06, 정성윤, 김민성, 백승준.

종합토론

【토론자】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통일학연구원장)

최윤희(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 前 합참의장)

김원수(The former Under-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신석호(동아닷컴 전무이사·동아일보 화정평화재단 연구위원)

【토론문】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정세

박 원 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통일학연구원장)

□ 대북정책

■ 대통령(백악관) 중심 외교

○ 트럼프 2기는 1기와 유사하게 대통령이 대외관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백악관 중심 외교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함. 트럼프는 지도자 간 관계를 내세워 직접 접촉을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할 것으로 판단됨.

○ 7월 공화당 전당대회 대선후보 수락 연설을 포함하여 김정은을 비롯한 시진핑, 푸틴, 네타냐후 등과 개인 관계를 수시로 언급한 바 있음. 다만, 트럼프의 발언 맥락은 바이든 행정부와 해리스 후보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임. 자신이 집권했을 때 안정적이었던 국제 관계가 바이든 시기에 도전받고 있음을 강조하는 비판적 언사임.

☞ 트럼프 2기에 대한 대응 방법 중의 하나는 지도자 간 접촉 빈도를 높이고 의견을 경청하게 하는 것임. 트럼프 1기 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트럼프에 가장 잘 대응한 지도자로 미국 내 언론(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이 평가한 바 있음. 사적 관계를 바탕으로 아베가 주창해 온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전략적(geo-strategic) 공간개념을 트럼프의 미국이 수용하여 전략을 발전시킨 바 있음.

☞ 따라서, 최단기간 내 지도자 간 만남을 성사하고 상호관계를 유지할 공통 분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트럼프는 사실관계에 상관없이 한번 입력된 정책에 대해서는 고정 관념화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빠른 입력이 필요함. 대표적 사례가 2017년 시진핑과 만남 후에 한국에 대한 부정적 역사관, 2018년 6월 김정은과 싱가포르 합의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표출된 연합훈련에 대한 비판적 견해 등임.

■ **트럼프의 행정부의 비핵화 선택지**

ㅇ트럼프의 불 예측성을 감안할 때 다음 4가지 선택지가 있음.

ㅇ첫째, 북한 비핵화라는 절대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에 대해 압박을 가하는 것임. 트럼프 대외정책의 핵심 특징 중 하나는 상대편을 최대치로 압박하여 유리한 협상 국면을 창출하는 것임. 2017년 트럼프가 시도한 대북 '최대 압박과 관여,' 2018년 하반기 관세를 통한 중국 압박 등 다수의 사례가 있음. 따라서, 북한과 협상 전에 북한을 다양한 형태로 압박할 수 있음.

ㅇ둘째, 북핵 문제 현상 유지를 모색하는 것임. 2018~19년 트럼프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충분히 경험한 바 있음. 2018년 6월 싱가포르 합의 후 미국 내 비판에 직면한 바 있고,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후에는 오히려 긍정적 국내 반응을 경험하였음. 특히 가장 난잡한 사업 환경 중 하나인 맨해튼 부동산업에 익숙한 트럼프는 비용 대 효과를 철저히 고려한 정책 시도가 1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판단됨. 북한 문제는 정치적 자산과 시간을 들여도 해결이 요원하다는 판단하에 억제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상 유지를 선택할 수 있음.

ㅇ셋째, 김정은과 직접 협상을 통해 정치적 상징성을 부각한 합의 도출을 시도할 수도 있음. 2018년 싱가포르 합의 때와 유사하게 "의미 없는 합의서에 서명하고 사진 찍고 정치적 승리를 선언해 버리는" 형태를 재연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 경우 2018년 4월과 유사하게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유예를 선포하고 미국은 일부 제재를 해제하는 형태도 가능함. 트럼프는 미 본토가 안전해졌다고 선언하면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것임.

ㅇ마지막으로, 북한과 핵 군축 협상을 시도하는 것임. 트럼프 2기 중요직 하마평에 오르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직무대행도 동 주장에 동의함. 밀러는 "(북핵은) 이미 호리병 밖으로 빠져나온 지니처럼 보인다. 이제 우리는 기대가 아니라 현실에 기반을 두고 협상해야 한다. 군축 협상에 대해서도 '왜 안 되느냐'라는 의견에 찬성하는 편이다. (핵)기술이 이미 확산됐고, 대화가 나쁘다고 생각지 않는다. (군축 협상은) 선택 가능하고, 더 효과적으로 (북한과) 의사소통을 시작할 수 있다면 단점이 뭐가 있겠는가"라고 주장한 바 있음. 지난 대선 때 민주·공화 양당 모두 정강정책에서 북한(한반도) 비핵화를 삭제한 바 있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비현실적이라는 워싱턴 내 분위기를 반영한 핵군축 협상이 시도될 수 있음.

ㅇ위의 시나리오 중 두 번째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큼. 미 행정부 2기가 시작되면 대통령은 대외정책에서 자신만의 '유산'(legacy)을 남기기 위해 노력함. 특히 공명심이 강한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을 목표로 실제 성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문제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 이미 정강정책과 '어젠다 47' 등에서 동 문제가 대중 강경책과 함께 핵심 대외정책으로 표방된 바 있음.

ㅇ북한 김정은의 경우도 이전과는 달리 트럼프를 쉽게 만나지 않을 가능성이 큼. 2019년 2월 하노이 굴욕 이후 2019년 12월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정면 돌파전'을 선포하고 지금도 유지함. 북한은 동 노선을 통해 미국과 협상 실패를 핵능력 고도화를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능력 확보까지 장기전을 선포한 바 있음. 2019년 5월부터 시도된 '비대칭 확전 우세' 형태로 한국에 대한 핵타격 능력은 고도화되었음. 따라서, 김정은이 미국과 협상을 시도하더라도 연합훈련 및 전략자산 전개 중단, 비핵 협상이 아닌 핵군축 협상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 미국도 쉽게 수용하기 어려우므로 양측간에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 있음.

☞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라는 절대 목표를 유지토록 해야 함. 동 목표가 우선순위를 상실한다면 협상과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는 요원함. 억제의 군사적 수단이 우선시되는 상황이므로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될 가능성이 크고,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이 비등해질 것임. 따라서 트럼프 2기 출범 직후 시작될 대북정책 검토에서 다시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절대 목표가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 더불어,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전격 회동을 통해 앞서 제시한 3번째 선택을 하는 상황을 막아야 함. 이를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 핵문제에 대해 밀접한 공조를 최대치로 유지해야 함. 트럼프 1기 이도훈-비건 라인과 같은 소통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임. 한국이 선제적으로 세 번째 선택지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해야 함.

□ 동맹 관련 의제

■ 방위비 분담 문제

ㅇ12차 SMA 재협상 가능성

●트럼프가 수차례 공포한 것처럼 한국에 추가 비용 부담을 요구하되, 12차 SMA를 부정한

후 재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그러나, 트럼프가 요구한 100억 달러 비용 분담은 특유의 서술 방식에서 기인한 것임. 10억 단위(billion)로 금액을 언급하는 발언 습관이 있고, 상대방과 협상 시 최대치 압박을 가하는 것에 익숙함.

- 실제로 SMA 틀에서 한국이 부담할 수 있는 최대치는 현재 상황에서 두 배 정도임. SMA 규정된 항목 차원에서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50% 이상을 감당하고 있음. 따라서, 최대치 인상 폭은 현 금액에서 두 배 정도이므로 트럼프가 요구하는 9배 수준의 인상은 불가능함. 이 이상의 비용은 SOFA를 개정하거나, 또 다른 예외 조항에 합의해야 가능한 것임.
  - ☞ 한국은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 비준을 거쳐 12차 SMA를 확정해야 할 것임. 트럼프 행정부가 무력화를 시도하더라도 협상 측면에서 국회 비준을 받은 조약 효력이 있는 합의를 근거로 일정 수준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임.

ㅇ전략자산 전개와 연합훈련 비용

- 트럼프는 2016년 시작된 1기 때와 유사하게 SMA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작전지원'(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비용)과 '대비태세'(미군의 한반도 순환 배치, 역외 훈련비용, 장비 및 이동 비용 등 한반도 외부 비용) 항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2018년 6월 미북 싱가포르 합의 직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트럼프는 한미연합훈련을 "값비싼" "도발적인" "전쟁게임" 등의 인식을 공공연히 표출한 바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비용을 특유의 틀과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형태로 요구할 수 있음.
- 실제로 요구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와 발전시켜 온 확장억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확장억제 제도화의 핵심 양대 축은 한미연합훈련에 북핵 억제와 대응을 포함하는 것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미국의 전략자산을 활용하는 것임. 따라서 이에 대한 비용을 요구할 경우 확장억제 약화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음.
  - ☞ 사고를 전향하여 한국도 거래적으로 동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 실상 미국의 전략자산은 한반도 인근에 '정례적'으로 배치되므로 상시 배치와 제도화된 순환 배치 형태는 아님. 따라서 한국이 일부 비용을 보존하는 대신 미국과 전략자산 전개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한다면 상시 배치 수준으로 격상할 수도 있을 것임. 이 경우 북핵 대비 억제력이 강화됨

■ 주한미군 문제

○ 주한미군 조정 가능성

- 트럼프 1기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비롯한 다수의 관료는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원한다고 증언함. 실제로 트럼프도 유사한 발언을 한 적이 있음.
- 그러나, 트럼프의 대외전략은 고립주의가 아닌 제한된 축소(retrenchment)전략에 역외 균형적 요인이 반영된 형태임. 더불어 동맹을 비용 편익 형태로 치환하여 미국의 책임과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추구하려 함. 대외경제정책은 무역장벽과 관세를 강조하므로 고립주의적 성향이 있음.
-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할 경우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됨. 트럼프는 미국이 동맹·우호국에 보유한 영향력을 활용하여 비용과 책임을 확대하기를 원하므로 영향력 자체 소멸의 고립주의를 선택할 가능성은 제한됨.
- 다만, 한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카드를 활용한 일부 조정을 통해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 조정 가능성

- 주한미군의 역할 및 기능은 기존의 대북 위협 대비에서 중국을 겨냥한 인태 지역 역내로 활동 범위를 확장할 가능성이 큼. 이는 민주당도 유사하여 해리스가 당선되었더라도 주한미군 역할 변경 가능성 있었음.

○ 전시작전권 전환

- 한국에 전작권을 조기 전환하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최대화하는 선택도 배제할 수 없음. 한국이 북한 위협 대비를 책임지고, 미국은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한정하는 형태도 가능함. 유사시 대규모 미 지상군 및 해·공군전력 투사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음.

○ 한국의 대중국 견제

-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 견제를 강화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우호국의

적극적 동참을 요청할 가능성이 큼. 특히 대만 유사시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한국은 기존 작전계획을 위 상황에 맞게 현실화하여 한국 방어의 주된 책임을 져야 함. 대신, 미국과 더욱 제도화된 핵위협 대응으로 동맹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캠프 데이비드 삼국 공약을 역내 위협 대비 구체 계획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연루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아닌, 한국이 대만 해협 위기 시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을 미국·일본과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한반도 유사시도 한미일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한반도 유사시 비전투원 소개작전을 위한 일본의 한국 영해 진입을 거부하는 대신 미국이 한국 내 일본인 소개를 담당하는 것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한미일 협력

ㅇ인·태 지역 소규모 협력체

● 트럼프가 인·태 지역 내 한미일 협력, 쿼드, 오커스 등의 소규모 다자협력 체제를 여전히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쿼드는 트럼프 행정부 때 시작된 바 있음. 트럼프는 이들 기제(mechanism)를 활용하여 동맹국의 책임과 비용을 묻고, 중국 견제에 활용할 수 있음.

☞ 한국의 입장에서 한미일 협력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개선된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지도자 간 직접 소통 채널을 활용하여 트럼프를 상대할 수 있음. 일본은 미국과 SMA를 시행하는 유일한 동맹국이고, 북핵 위협에 노출되는 등 다수의 안보 이해를 공유하므로 트럼프의 미국을 상대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국임. 트럼프의 대통령 중심 외교를 감안할 때도 소규모 지도자 협의체를 통한 소통이 효과적일 수 있음.

【토론문】

미 대선 이후 한반도 안보 전망 및 대응 방안

최 윤 희(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 前 합참의장)

1. 당선자 안보 정책 기조 및 파급 효과

○기조: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안보 무임승차 불허, 신고립주의 채택

○파급 효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감축, 국제경찰 역할 중단

※ 전반적으로 타협이 없는 일방적, 공세적 정책 추진 예상

2. 대응 방안

○기조: 수동적 대응에서 능동적, 공세적 대응으로 전환

○사안별 대응 방안

- 방위비 분담금: 일정 부분 증액에 동의하되 주한미군의 임무/역할을 북한 위협 억지를 넘어 중국 견제로 확대, 이를 위한 능력 확충 요구
- 주한미군 감축: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미군 주둔 가치를 부각(중국 견제, 실전적 연합훈련 기회 제공 등)
- 국제경찰 임무 중단, 신고립주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한 핵 능력 확보 등 독자적 방위 태세 구축, 중국의 해양 팽창정책에 따른 동·남중국해 해양 안보 위협과 후티 반군/테러단체 등 위협에 대비한 해상 수송로 보호 대책 강구(해군 임무/전략 수정, 능력 확충)

※ 미·중 갈등의 본질, 무대는 해양 통제권임, 트럼프 당선자의 미 해군력 증강을 위한 대한민국 조선소 협조 발언 함의 유념 필요

※ 미국은 쉘가스 유전 개발과 On Shoring으로 에너지, 일반 소비재 수입 필요성이 대폭 감소하여 해상 수송로 보호 임무를 등한시함

【토론문】

Sober messages from American election, our tasks

Kim Won-soo(The former Under-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outcome of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came out much earlier than widely predicted. To the big surprise of most observers, it was a sweeping victory for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He made a very rare comeback to a nonconsecutive term, second in the U.S. electoral history, 132 years after the 1892 election. He also made history once again, being the oldest ever to be elected. The Republican Party is also set to control both houses of Congress.

This outcome defies most opinion polls and predictions by experts. Pollsters largely failed to capture the so-called "shy Trump" voters again despite their efforts to rectify what they missed twice in the 2016 and 2020 elections. The "hidden Harris" voters turned out to be marginal as compared to the "shy Trump" ones. This reveals the limitations of opinion polls in reading the voters' minds, which are almost equally divided and polarized on opposite ends. Challenges become even greater when the outcome is decided by a small percentage of swing votes within the margin of error of polls.

Trump's reelection has sent out deeply reverberating messages to the whole world. Almost all countries in the Global West, East and South will be busy pondering what Trump 2.0 will mean for them and figuring out what should be the coping strategy. The following three messages stand out.

First and foremost is on the domestic front. This election was the popular verdict on the economic performance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The famous saying "It's the economy, stupid" has proved to be a factor again this time. Throughout the history of the American presidential elections, inflation has been the spoiler to the sitting presidency seeking reelection. Although President Joe Biden gave up the race, the voters perceived his successor candidate,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as part of the Biden team. It was intrinsically difficult for Harris to distinguish herself from the Biden legacy. In a larger sense, it was a repeat of the 2020 election when the voters turned against the seemingly poor performance of Trump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s a corollary to this, the second message is on the international economic front. Trade protectionism and beggar thy neighbor behavior are likely to rise under the slogans of "America First" and "Make America Great Again." Throughout the campaign trail, Trump repeatedly threatened to levy customs duties universal against all countries and much higher against China. He also threatened to cut subsidies for foreign companies investing in the United States. Given the interconnectedness of the global economy, however, these threats will be harder to implement in reality than said. Any protectionist measures are likely to bring about negative consequences, ultimately hurting the U.S. economy as well.

Thirdly, on international geopolitics. Trump 2.0 will mean resuming the U.S. retreat from global leadership.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this trend has slowed down, but not stopped either, as shown in the abrupt withdrawal from Afghanistan in 2020. The pace of the retreat is bound to be accelerated under Trump 2.0, starting from the re-withdrawal from the Paris Climate Agreement. Multilateralism will be put under greater stress. Unilateralism and bilateralism will become the main tools of U.S. diplomacy, while minilateral or plural-lateral formats will be selectively used. The alliance relationship is also likely to face pressure for rebalancing.

This trend of American retreat will spur the geopolitical tectonic shifts along the fault lines between the Global West and East. A global arc of instability may emerge from Eastern Europe, Caucasus, the Middle East and South Asia to the South and East China Seas and the Korean Peninsula. Players seeking to change the status quo along this arc will be tempted to exploit the perceived power vacuum to their advantage. It will heighten the likelihood of conflict escalation involving major powers by miscalculation, misunderstanding or miscommunication.

These sober messages will be analyzed carefully and watched closely around the world. Trump succeeded in persuading Americans to vote for him with his rhetoric of promises to get jobs back home. His unconventional style proved to be much more effective as a challenger rather than the incumbent. But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and how he will and can translate his words into reality. As shown in his first term, the devil is always in the details. Now that he is heading back to the White House, the burden of proof will be on him.

We should not be over-alarmed nor presumptive about what policies will be ultimately taken by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We must be coolheaded in analyzing the above messages and thinking ahead about our options. We must consider all options on the table with their pros and cons carefully weighed. Last but not least, we must be proactive in reaching out to the new U.S. administration. And we must do so, whenever necessary and feasible, in concert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토론문 보완】

2024 미국 대선 결과: 국제정치적 함의

김 원 수(전 유엔사무차장)

1. 미 대선 결과 평가

가. 승부 가른 요인

- 현직에 대한 심판
- 인플레로 악화된 체감 경기가 결정적 요인
- 해리스 부통령의 차별화 실패

나. 미국민의 전반적인 고립주의 환원 경향 확인

- 보호무역주의 고조와 상호 보복조치로 세계 경제에 악영향 예상
  = 그러나 커진 상호의존성으로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 여파 불가피
-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축소로 다자주의 약화와 동맹의 재조정 압력 확대

다. 미국의 대외개입 기피로 세계적인 지정학 단층대 활성화

- 동유럽, 코커서스, 중동, 서남아, 남중국해, 동중국해, 한반도로 이어지는 '불안정의 호(arc of instability)' 대두
-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가자 전쟁은 단적인 예
- 현상변경 의지를 가진 행위자들의 오판으로 강대국이 의도하지 않은 전면전으로 비화할 위험 증대
- 이 위험을 관리해야 할 동맹과 다자주의의 약화를 보완할 새로운 대안 모색 시급

2. 우리의 대책

가. '불안정의 호' 최전선에 서 있는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에 직면
- 그러나 대내외 여건은 동맹/다자주의 약화와 국론 분열로 최악의 상황

나. 트럼프 2.0에 대해 지나친 기우는 배제하고 냉정한 대책 수립, 시행 필요

다. **국론 통합에 기반**한 **단단하고 실용적인 자강**과 **열리고 포용적인 연대 구**축이 유일한 대안
- 자강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면서 최선의 시나리오를 추구하는 기본에서 출발
- 연대는 불확실성과 유동성에 대처하는 다양하고 중층적인 소 다자주의 네트워 구축에 초점
- 세계적 동/서 (Global East and West), 남/북 (Global South and North) 진영간 교량 역할 자임

【토론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정책, 대북정책 전망
—항목과 개념, 1기와의 비교 관점에서—

신 석 호(동아닷컴 전무이사·동아일보 화정평화재단 연구위원)

1. 개요

본 토론문에서는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의 발제문을 중심으로 11월 5일 미국 대선 이후 쏟아져 나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대통령의 제2기 대외정책 전망에 필요한 카테고리를 정리하고 개념을 정의해 보려는 시도.

또한 2017년 1월부터 4년 동안 진행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가운데 토론자가 기자로서 현장에서 경험했던 주요 특징을 '정치적 현실주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2기 행정부에서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변수들을 점검.

2. 대외정책의 주요 항목과 개념

□패권(hegemony)의 성격과 동맹 관계

발제자는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도래할 동맹의 성격 변화를 과거 '깊은 동맹(deep alliance)의 시대'에서 '거래 동맹(easy alliance)의 시대'라고 표현하였음. 이전의 동맹이 역사와 이념에 기반한 것이었다면, 앞으로의 동맹이 상호 이득의 관점에 따른 거래적 성격이 될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됨.

이 같은 동맹 관계의 변화는 미국이라는 패권국가의 성격 변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 토론자는 트럼프 행정부 이전, 또는 바이든 행정부까지 미국 패권이 동맹국에 대해 '자비로운

패권(benign hegemon)'이었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그것을 '인색한 패권(stingy hegemon)'이라고 설명한 바 있음.[1] 트럼프 행정부 1기에 이어 2기에는 동맹국들이 글로벌 안보를 위한 비용을 지금보다 더 분담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 커질 것이 분명해 보임. 양국 및 기업 간 경제통상 관계에서도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것임. 이에 대한 대비를 강조한 발제자에 동의함.

□ 고립주의 vs 개입주의

발제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가 "개입주의(engagement)보다는 극단적이고 편협한 고립주의(narrow-minded isolationism)로 회귀하면서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세계 경찰로서 미국의 역할이 종료된다. 미국의 전통적인 국제질서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주장하였음.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선거 과정에서 고립주의로의 회귀를 암시했으나 집권 후 1기 내내 미국의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개입주의 기조를 유지하였음. 아시아의 지역 패권국을 노리는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 정책을 실행하였고 미국의 국방비도 오바마 행정부 당시보다 증액하였음.

따라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기의 개입주의를 포기하고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전통적인 미국식 고립주의로 회귀할 것인지는 관찰이 필요함. 그렇게 될 경우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해 온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에서 회귀하여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이후 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유지되었던 미국의 전통적인 대외정책으로 복귀하는 것임.

□ 글로벌 개입주의의 성격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기 때의 대외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면 그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오바마 행정부까지 유지되었던 '자유주의적 개입주의(liberal interventionism)에서 벗어난 비자유주의적 개입주의(Illiberal interventionism)의 유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임.[2]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는 미국이 국내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념과 가치를 국제질서에 투사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전제였다면, 트럼프

1 신석호 "바이든 자서전에 헛꿈 꿀 김정은에게"(동아일보 '오늘과 내일' 칼럼, 2020년 11월 6일자).
2 신석호 "국제정치학의 헤게모니 이론으로 본 미중 갈등" 북대북한연구회 편『김정은 시대 북한을 보는 10가지 시각: 지속과 변화』(역사인, 2019) 제10장.

행정부 1기의 개입주의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독재국가와도 협상하고 관세장벽을 쌓는 등 시장주의를 스스로 허문다는 것이 특징임.

□ **다자주의 vs 일방주의**

발제문 4페이지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트럼프 행정부 2기도 1기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다자주의보다는 일방주의적 접근을 취할 것으로 보임.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기후변화협정이나 유네스코 등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스스로 만든 다자적 레짐에서 탈퇴하고 상대 국가와의 일대일 협상을 추진하는 방식임.

통상 정책에서도 관세장벽 설치 등으로 WTO 체제를 이완하는 것과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주도의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대항해 만든 경제안보 국제조직인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에서의 탈퇴도 예상됨.

3. 트럼프 행정부 1기 대북정책의 특징과 평가

□ **최대한의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트럼프 행정부 1기의 대북정책으로 북한을 극한으로 압박한 뒤, 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면 과감히 대화하겠다는 뜻.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잇단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여 선제타격까지 검토하는 대결 국면을 조성[3].

그러다 2018년부터 김정은과의 대화에 나서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 이후 하노이와 판문점 등 모두 3차례 정상회담을 함.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북-미관계는 소강 국면에 빠짐.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동안 대북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압박과 대화를 통해 북한 김정은을 주도적으로 끌고 다녔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음. 하지만 북한 비핵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하였음. 특히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화 국면에서의 행동패턴은 비판적 평가를 피할 수 없음.

---

3 대결국면 동안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을 직전 오바마 행정부와 비교해 검토한 자료로는 신석호 『오바마는 왜 트럼프처럼 김정은을 다루지 않았을까』(린쓰, 2018) 에필로그를 참조.

□ 대화국면 (2018년 1월~2019년 12월)의 비판적 평가

번호	특 징	내 용	비판적 평가
1	북한 문제 해결 비전의 축소	한반도 통일보다는 북한 비핵화에 집중	북한이 비핵화한다면 김정은 정권을 용인하는 결과
2	북한 독재자와의 '톱 다운' 방식 대화	김정은과 3차례 정상회담, 개인적 서신 왕래	국가이익 걸린 정치 이슈를 사인 간 경제 협상처럼 다룸
3	군사훈련을 협상 칩으로 활용	대화 기간 중 한미군사훈련의 축소 또는 중단	평화 시에도 훈련은 계속하라는 전쟁원칙 위배
4	경제적 인센티브 활용	대북 제재 완화와 '평양 트럼프 타워' 제안 등	정치와 국가안보가 경제에 우선한다는 원칙 위배
5	김정은의 '비핵화' 말과 의지 과신	'조선반도 비핵화' 진의 파악 못함	상대방의 말보다 행동, 의도보다 능력이 중요하다는 원칙 무시

4. 트럼프 행정부 2기 대북정책의 환경변화

2025년 1월 출범할 제2기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북한 역시 2017년과는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음. 따라서 7년 전과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주도적으로 행동할 여지가 적은 상태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김정은의 북한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우선 관리 필요성. - 러시아 및 중국이 과거처럼 대북 제재 등에 협조하지 않음. -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학습효과. - 강대국 러시아에 군사적으로 밀착한 북한. 악화된 남북 관계.	- 러시아와의 군사 경제적 협력 강화를 통한 핵미사일 추가 고도화 가능성. 북-중-러 3각 협력에 대한 기대. - 트럼프 대통령과의 하노이 회담 결렬에서 얻은 학습효과. 미국과 협상으로 '핵을 가진 평화'를 용인받을 수 없다. - 미국과 협상에 대한민국 정부의 조력을 받는 것에 대한 회의(문재인 정부 학습효과).

【다자토론】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정세

사회 :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발표 : 남성욱 고려대학교 교수, 통일융합연구원장
토론 :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통일학연구원장
최윤희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 前 합참의장
김원수 前 유엔사무차장
신석호 동아닷컴 전무이사

▣ **박원곤 교수** : 한, 두 가지 발표자가 안 다루신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제가 연구 영역이 미국과 북한입니다. 이번 선거는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 있어 선거의 주요한 패인은, 민주당이 시대정신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주요한 지지층은 노동자 계층인데 이미 이전 선거에서 노동자, 서민들이, 고졸 이하 백인들이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 경고를 놓치고 문화 분야, 성정체성 등 굉장히 급진적인 진보로 가버리는 바람에 유권자와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로 보면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과연 김정은을 만날 것인가입니다. 이번에 만날 때는 조건을 걸 겁니다, 이를테면 핵 군축 협상과 같은 것을 말입니다. 물론 트럼프가 가진 불예측성 때문에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16-17년 그 당시 SOFA 협상을 할 때 연합 작전 비용, 미국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에 관해 한국이 성공적으로 방어를 했습니다. 이번 트럼프 2기는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2가지가 한국에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 **백승주 회장** : 올해에 가장 고생한 사람들이 미국 대선을 예측한 사람들 일 겁니다. 박원곤

교수님이 북한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윤희 총재** : 저는 안보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신고립주의를 주장하면서 그걸로 인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안보 무임승차는 허용하지 않겠다. 이제 미국이 국제 경찰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입니다. 어떤 정책 전략을 세우든 간에 핵 위협에 대해서는 핵이 아니면 핵 억지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것은 해양 안보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해군은, 오직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형태입니다. 한반도를 벗어나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국제 경찰을 안 하게 되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중국의 해양 팽창 정책이 갈등의 원인입니다. 이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중국이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입니다. 미국이 해줄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 해군의 역할을 바꿔야 합니다. 좀 더 밖으로 뻗어나가서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론조성에 힘써주셔야 합니다.

▣ **백승주 회장** : 최윤희 의장님께서는, 트럼프 이후에, 핵우산 체제의 불확실성에 더 신경 써서 해군에 많은 역할을 주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 **김원수 사무차장** :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윤희 의장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고립주의라고 하지만 미국은 '원래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 먼로 독트린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유럽에서 시작해서 코카서스, 서남아, 동중국해, 한반도 등 커다란 불완전의 호가 지금 활성화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내전이 그중 하나입니다. 현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국가들은 차고 넘칩니다. 그런 행위자들 행동에 호랑이들이 휩쓸리면 제3차 대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모험했는데 위험 없이 이득을 얻었다면 다른 행위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미국과 중국이 (스스로 자기들이) 나서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할 수 있냐를 고려할 때, 우리는 낮아진 한반도의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3차 대전은 미중이 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우선순위에 우리를

높이고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남성욱 원장님이 말씀대로 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판을 우리가 원하는 것과 가깝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유인책을 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1기 때는 트럼프가 미국 사람 표현에 의하면 어덜트(Adult)를 썼습니다. 2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 보좌관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을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거기에 얹어서 얻어야 할 것을 얻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매우 많습니다. 핵도 있고, 군사 장비 등 그런 것들을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서 얻어야 합니다. 우리 혼자만으로는 안되므로 우리와 같은 동맹국들, 아시아·유럽의 동맹국들은 대책을 생각하고 있으므로 같이 손을 잡아야 합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트럼프 2.0을 맞이하여 다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 내에서는 어떤 정책이든 여야가 한 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백승주 회장** :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는데 나중에 네 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 기다리신 신석호 전무이사님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 **신석호 전무이사** : 두 가지 근본적인 불안감이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의 힘이 너무 커져서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 두 번째는 미국이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나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있습니다. 2기 트럼프에 대해서 신고립주의에 대한 염려는 당연합니다. 제가 워싱턴 특파원을 하면서 했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 수 없지만 1기 트럼프까지만 보면 그렇게 심각하게 고립주의를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미국이 패권국가인데 그 성격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트럼프는 동맹국에게도 여러 가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쫀쫀한 패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고립주의라고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비자유주의적 개인주의를 지향하고, 국제정치적으로도 말썽 국가와도 대화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가 1기에서 관찰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쇼잉을 많이 했지만 실제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적입니다.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도 성과를 못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현실주의에 입각하지 않은 어프로치를 했습니다. 2기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더 낮아지는 듯

합니다. 1기 때보다는 더 환경이 안 좋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미국의 정통적인 대외정책이 고립주의긴 하지만 1차 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인들이 깊이 반성한 것은 유럽과 아시아에 하나의 국가가 패권을 가지게 되는 상황은 미국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고립주의를 파기하고 당시 개입을 한 건데 그러므로,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득세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이 그것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을 노리는 한 미국이 그것의 발호(跋扈)를 가만히 둘 수 없는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지정학적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백승주 회장** : 오늘 남성욱 발표자분이 발표를 잘하셨는지 다른 토론자분이 틀렸다고 공격해야 하는데 그것이 없었네요, 이제 청중에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 전에 특별히 요미우리신문 서울지국에서 오신 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청중1** : 저는 군 생활을 했는데 주요한 것은 결국 자주국방입니다. 아까 다른 분들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너무 트럼프라고 걱정하고 호들갑 떨 것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자주국방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없습니다. 대통령에 따라서 군대가 계속 변하는데, 최근은 계속 줄여가고 있고 군인이 군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을 길러야 합니다.

▣ **청중2** : 지금 두 곳에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안한 조짐이 보이는데 주한미군이, 일이 생기면 (미국)신정부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일지 아는 분들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하고 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피해를 당할 일은 없을지 말씀해 주시고, 각종 기업에 대한 보조금에 영향은 없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미국은 기축통화국인데 그것들이 또 불안 요인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청중3** : 새로운 트럼프 시대,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안보 분야에 협력을 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 **남성욱 교수** : 트럼프 전 비서실장이 왔을 때 만났었는데 왜 이렇게 짧게 하셨냐고 물어봤더니 늘 말리느라 그랬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저를 보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걱정해야 합니다. 44살 중령 출신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지금 미국정치에서 군을 본인 뜻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백승주 회장님이 말씀하신 주한미군 철수 카드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주한미군) 병력이 나갔다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모빌리티(유동성)가 높아졌습니다. 호들갑을 떨어야 합니다. 현실입니다. 자주국방을 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자주국방은 기본이되, 동맹을 통해서 안보를 지키는 겁니다. 동맹은 불가피합니다. 글로벌 전쟁 시대에 혼자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한미군 중 1/3 병력은 언제든 (트럼프가) 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신석호 전무이사** : 중국이 덩치를 키워가고 있는 상황에 러시아까지 지역 정치에 끼어들었는데 그런 상황에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 **김원수 사무차장** : 트럼프 2.0 당연히 걱정해야죠, 그러나 과도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대응을 잘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을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하죠. 우리 군도 그렇지만, 이번에 홀로서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유럽에서 아시아로 왔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공화당,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한미군은 중요합니다. 북한 등의 문제로 우리는 트럼프 2.0에도 잘 설명할 수 있고 잘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선(最善)의 자주국방은 핵무장이지만, 우리는 당사국으로서 NPT 체제를 흔들지 않아야 합니다. 동시에 북한의 핵에 대한 위협도 공동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점도 한미가 같이 해야 합니다. 20년 전에 한국에 핵과 관련한 흔적이 나와서 굉장히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이것을 크게 비난한 나라들이 영국, 프랑스 등이었습니다. 우리가 NPT를 이탈할 때 가장 크게 반반할 나라들은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결국 우리가 혼자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국제 사회의 모범국가로 살아왔는데 북한보다 불량국가가 되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역시 나토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델을 잘 살펴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신 이사님이 말했듯이 미국이 아시아에서 발 빼기란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경찰 역할에서 미국이 물러나고자 하고 있고, 그러면서 다자주의를 약화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자주의가 약화하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다자주의 한·미·일, 한·중·일 등 3자, 4자, 5자를 적극적으로 끌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 **최윤희 총재** : 주한미군 철수, 감축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수세적으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공세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은, 상호방위조약은, 대만 사태가 발생하면 주한미군이 빠진다는 것인데 제가 보는 관점은 바뀌었습니다. 대만 사태가 발생하면 북한도 동시에 쳐들어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터지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주한미군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군도 같이 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주한미군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핵 문제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에서 정치가 어떻고, 국제적 레짐이 어떻고는,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백승주 회장** : 돌려서 말씀하셨지만, 주한미군 늘리고 핵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 **박원곤 교수** : 주한미군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트럼프의 정책이라는 것은 고립주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고립주의를 보입니다. 다른 것들은 고립주의라기보다는 축소라고 보입니다. 제한적 축소 형태로 간다면 주한미군은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크고 일부 축소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에 대한 대비만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아시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만 사태 등이 발생했을 때 주한미군의 전진 배치 등 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군사적으로 명확히 확인된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주한미군이 대만 사태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 주일미군이 거리나 저력상 그 역할을 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한반도 방어의 1차적인 문제는 남북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재래식 전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대비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핵에 대해서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한미작전계획을 완전히 바꿔서 제도화된 수준을 올려야 합니다.

아까 (청중 중에서) 요미우리 서울지국 황웅재님 질문을 해주셨는데, 트럼프 2기에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안보 분야 협력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2기로 들어오면서 이전보다는 대응하는 방법이 나아졌습니다. 이미 4년간 경험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일관계입니다. 이전에는 한일관계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대만 등 미국은 걸린 문제들이 많으므로 한미일 관계를 중요하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등장한다고 해서 완전히 세상이 무너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까 한가지 질문 중에 반도체 관련 법 내용을 문의해 주셨는데 미국 정치를 아는 분들은 법이 통과될 때, 미국 상원 같은 경우에는 60여 명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반도체 법에 해당하는 지역들 대부분이 공화당 의원들인데, 그들에게 반도체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쉽게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 **백승주 회장** : 끝나면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 리셉션을 하면서 토론을 할 수 있으므로 리셉션 장소에서 토론을 더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던진 질문에 제가 대답을 하자면, 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70년 초에 미군 7사단이 철수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미군 철수에 대해서 핵 개발로 대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내놓으면,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의 새로운, 비장한 태세로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는 게 어떨지 합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고민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고민 안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방국, 동아시아 핵심 우방국 일본의 고민과 그런 것들을, 대승적으로 같이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위비분담금이나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국회가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제5회 KWO 나지포럼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정세

발 행 인 백승주
발 행 일 2024년 11월 21일
발 행 처 전쟁기념사업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 02. 709. 3046
편집위원장 서진아
편 집 위 원 김유석, 김홍희
제 작 도서출판 온샘

* 이 자료집의 저작권은 전쟁기념관에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원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전쟁기념관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전쟁기념사업회

KWO Korea War-memorial Organization